



# 7가지 교육 현안의 문제점과 대책



2020.12.23

황영남 안양예술고등학교 교장  
/미래교육자유포럼 대표



# 1. 초·중·고에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지속적인 증가



## ● 문제점

- 일부 교원단체에서 학력의 개념을 확대하여 종합적 학력(인성포함)으로 포장하지만, 지속적 학력 저하되고 있음. 코로나 시대에 더욱 심화.
- 2004년 표집평가(초6, 중3, 고2), 2009년 전수평가(초6, 중3, 고2)에서 다시 2017년 표집조사(중3, 고2)로 변경되고 시행도 시·도별 선택에 맡김.
- 소위 진보교육감을 비롯한 일부교원단체들은 시·도간, 지역간, 학교간, 학급간 격차 심각해지니까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지 말자고 주장.

# 1. 초·중·고에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지속적인 증가

## ● 대책

- 국가수준 학교급별, 교과별 최저 학력 수준을 교육과정에서 제시 필요
- 학생과 학교에서 상시 활용할 수 있는 문제은행식 평가 시스템 구축
-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책임 교육제 실시, 관련 정보공개하여 공교육 신뢰회복
- 학교에서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,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책임질 필요가 있음.

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기초학력  
미달 비율 (단위: %)

| 구분   | 중학교 |      |     | 고등학교 |      |     |
|------|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|
|      | 국어  | 수학   | 영어  | 국어   | 수학   | 영어  |
| 연도   |     |      |     |      |      |     |
| 2017 | 2.6 | 7.1  | 3.2 | 5.0  | 9.9  | 4.1 |
| 2018 | 4.4 | 11.1 | 5.3 | 3.4  | 10.4 | 6.2 |
| 2019 | 4.1 | 11.8 | 3.3 | 4.0  | 9.0  | 3.6 |

※2017년부터는 표집 조사이므로 표준오차 발생 자료:교육부

## 2.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런 원격교육 시행으로 학력격차 심화 초래



### ● 문제점

- 교육여건과 학습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상대적 불이익이 커짐.
- 학생들의 사회적 관계성이 약화되고, 기본생활 지도가 무너짐.
- 코로나19로 특히 초1, 중1, 고1의 적기 교육을 놓치게 됨.
- 비체계적인 원격수업 장기화로 학력격차 심화되고 학습권이 사라짐.
-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학습



## 2.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런 원격교육 시행으로 학력격차 심화 초래



### ● 대책

- 코로나가 가져온 원격교육과 대면교육의 통합시대에 적합한 교육정책 시행.
- 원격수업의 장점(편리한 장소와 시간, 필요한 내용의 선택)을 살리는 정책 필요.
- 학력격차, 교육격차 대책으로 AI를 활용한 교육 적극 추진.
- 소규모 학교, 농어촌 학교에 교·사대생(또는 임용전 교사)의 일정기간 의무적 교육봉사 활용.
- 교육소외지역 학생들의 학력수준 제고를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.

### 3. 수시와 정시 갈등 및 잦은 대입정책의 변경



#### ● 문제점

- 현 대입정책은 고등학교 입학부터 대입에 매달리는 고교 3년의 입시지옥이 됨(실수시 만회 불가능).
- 대입에서 고교간 학력차를 무시한 내신반영은 고교내신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.
- 학령인구 감소로 대입 정원 미달 현상 심화 및 상위권 대학 정시전형을 제외한 수능 비중 축소<sup>1)</sup>.
- 고1부터 내신(수행평가, 정기고사), 비교과활동, 수능시험 등 모두 관리해야 하는 병폐

1) 2021학년도 전국 4년제대학 신입생 모집인원 35만884명 중 26만 8239명(76.4%)을 수시로 선발 또한 전체 수시모집 중에서 20만4955명(76.4%)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음. 즉 4년제 대학 전체 모집인원의 58.4%가 대입 평가요소로 수능을 반영하지 않음.

### 3. 수시와 정시 갈등 및 잦은 대입정책의 변경



#### ● 대책

- 수시와 정시 선택, 대입전형의 방법과 요소 등에서 대학의 자율성 보장.
- 대입 다양성 확대로 학생들의 적성과 희망에 따른 선택권 보장.
- 수능의 EBS 연계 정책 폐지 및 수능의 문제은행화로 공신력 제고.
- 고교 내신과 대학 전공의 연관성이 확보된 반영 필요.



## 4. 무상교육과 교육복지 확대



### ● 문제점

- 무상급식, 무상교복, 무상교육 등 무상시리즈 확대에 급증하는 예산수요 문제.
- 선출직 교육감이 펼치는 퍼주기식 교육복지는 교육 포퓰리즘.
- 필요한 대상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역차별적 복지 혜택.
- 국·공립과 사립의 차별을 두지 않는 지원 정책으로 사학의 정체성 상실.



## 4. 무상교육과 교육복지 확대



### ● 대책

- '교육이 최고의 복지'라는 사회적 공감대 필요.
- 완전한 교육복지를 위해 출생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 적극 검토.
- 고교 졸업시(혹은 만18세) 일정금액 평생교육 바우처 지급.
- 사립학교는 1인당 평균교육비 지원 + 개인별 차액 부담.



## 5. 보육과 양육의 갈등



### ● 문제점

- 보육과 양육(돌봄)의 경계가 모호하고 관리 주체가 다름으로 인한 갈등 심화.
- 점증하는 예산 투입에 비해 수요자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비효율성 증대.



어린이집 (자료 한경DB)

공간과



▲ 어린이집 아동들이 간식을 먹고 있는 모습. ©뉴스시스

## 5. 보육과 양육의 갈등



### ● 대책

- 영유아 양육은 부모 책임 - 적절한 양육수당 매월 지급.
- 일하는 부모를 위한 보육의 18시간제 운영(지자체와 교육기관의 협력)
- 임신부터 아동의 18세(또는 20세)까지 부모(엄마)에게 자녀 보육비 지급.



의 종합적 체계적 정비



## 6. 고교학점제와 사립학교 문제



### ● 문제점

-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는 준비 미흡으로 형식에 그칠 우려.
- 학생·학부모의 선택 중심이 아닌 실질적인 학교와 교사 중심 고교학점제.
- 교육과정 다양화, 교과목 수준 다양화가 허용되기 어려운 학교현장.
- 사학의 자주성과 독립성 부족으로 특수성이 사라지고 교육청 의존도만 높아짐.

## 6. 고교학점제와 사립학교 문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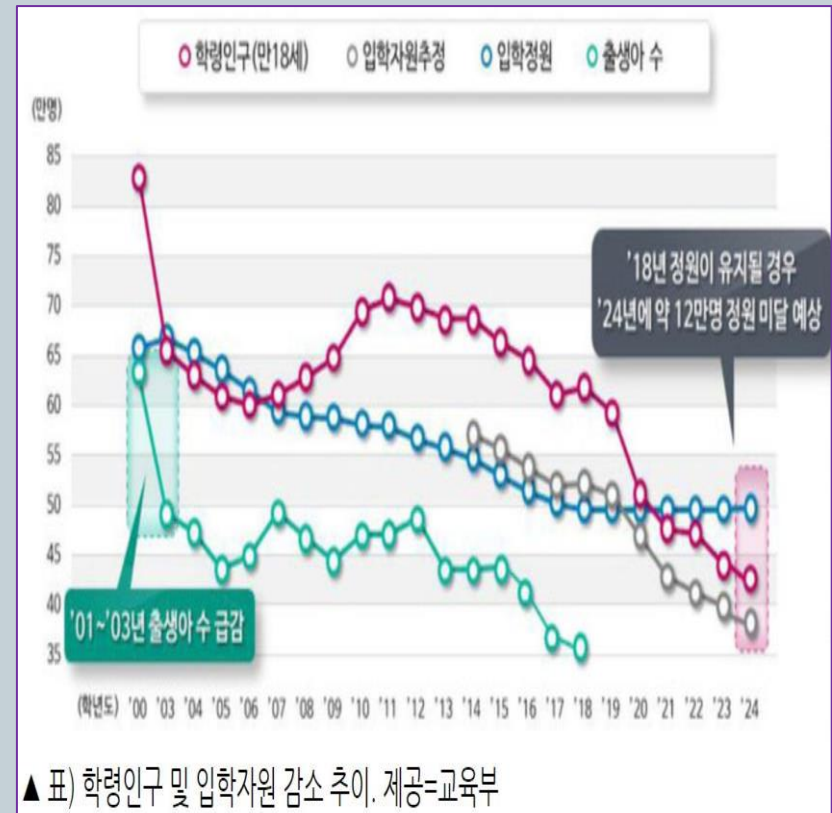
### ● 대책

- 교사들의 복수자격 의무화 등 실질적인 학생선택 고교학점제를 위한 정책 필요.
- 과목별 상대적 절대평가제 도입과 국가수준의 최저학력 보장을 위한 기준 마련.
- 학교의 다양화 특성화로 고교선택제를 모색하는 것을 적극 검토(예를 들면 10개의 고교 중 일반고 4, 수학과학교 2, 문화예술고 2, 체육고 1, 외국어고1로 구분하여 선택)
- 사학평가를 통해 지원을 등급별 차별화하고, 사학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유도.

## 7. 기타: 학령인구 감소와 교·사대 통합, 소규모 초·중·고 문제

### ● 대책

- 학령인구 감소는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여 종합적, 적극적 대책 필요.
- 교원 자격증의 다양화, 복수화로 유·초·중·고의 교원수급 탄력성 제고.
- 소규모 초·중·고의 통합학교 적극 운영 및 분교체제 확대로 교육 관리직 축소.
-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주장은 과학적, 교육적 근거가 부족.
- 교육감 직선제 폐지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지자체의 교육책





감사합니다.^^